■ '박연차 게이트' 서갑원·이광재 내일 선고 관심

4월 재·보궐 선거 판 커지나

政資法 위반 형 확정되면 공직 박탈

여야 지도부, 패배땐 '책임론' 일 듯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27일로 예정된 '박연차 리스트' 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항소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광재 강원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4월 재보궐선거는 최소한 광역단체장 1곳(강원지사)과 국회의원 3곳(순천, 분당을, 김해을) 등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적 의미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4월 재보선 결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촉발하거나 민주당의 동력 부족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4월 재보선 결과는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설화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판이 커진 4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퇴진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기 대선 후보 티켓을 둘러싸고 친이(친 이명박 대통령)계와 친박(친 박근혜 의원)계의 조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 재보선의 판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4월 재보선에 강원도지사 자리까지 포함된다면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입장은 마찬가지. 손 대표는 취임 이후, 장외투쟁 등을 통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자릿 수'에서 머무르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책임론'이 급부상, 손 대표의 리더십은 커다란 상처가 나는 것은 물론 차기 대권 도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4월 재보선 구도는 여야 그 어느 누구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 마음을 졸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특히, 대법원 판결 대상이 민주당 소속의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의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은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지역 민심은 그동안 서 의원이 성실하게 의정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보궐선거를 준비해왔던 입지자들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MB '개헌 논의' 발언 해석 제각각

친이 "탄력 받을 것" 친박 "줄세우기 의심"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수뇌부에게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여당 내에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각 정파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특히 친이재오계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개헌의 공론화에 본격 시동을 거는 형국이다. 다음달 8~10일로 연기된 한나라당 개헌 의총을 기점으로 개헌론을 달군 뒤 '개헌 정국'을 본격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만찬 회동에 참석한 한 친이 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헌법이 상황에 안 맞는다'며 당에서 개헌을 제대로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친이 핵심인사도 "그동안은 마치 이재오 특임장관 혼자 개헌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동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제 개헌은 굴러갈 수 있는 어젠다가 됐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언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6일 오전 조찬 간담회를 갖고 개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함께 내일로'가 개헌론 확산에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중도 인사들도 개헌의 배경에 의구심을 품으며 "줄세우기가 아니냐"고 언급하는 등 '권력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다.

한 친박 의원은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빅뱅 수준에 이를 만큼 당내 갈등이 대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력 대권후보의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미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은 "국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고나오는 게 순수한 개헌 의지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23일 당·청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당에서 개헌논의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말씀했고, 평소 하던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개헌은 당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청와대는 일체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개헌 안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복지 기획단 증세 반대자 일색"

정세균 "복지 정책 지혜로운 접근 필요"

민주 '부유세' 놓고 논란 확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 주장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 신문 여론조사에서 부유세에 81%가 찬성했다"며 "(부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부유세를 부자에 대한 징벌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증세(세목 신설) 없는 복지론'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몇 조 절약하는 것으로는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70% 복지국가를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하나같이 다 증세 반대론자"라며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내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우선 정세균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증세논란을 계속하면 복지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부유세에는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어떤 복지정책을 할지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재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균 의원도 부유세 문제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느냐"며 "그러나 세금폭탄으로 낙인이 찍혀 선거 참패의 이유가 됐다. 이 쓰라린 경험을 되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유세에 대해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증세 찬성론자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당장 '세금 없이는 복지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폭탄부터 떨어트리는 느낌을 준다.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당 기획단은 오는 30일 재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부유세에 대한 이런 입장차로 재원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 재원 논란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대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의회 조례 평가 광주시의회 장려상

광주시의회는 2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최근 발표한 제7회 우수조례평가 결과 단체부문 장려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1년 동안 제정된 조례의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광주시의회는 의원발의 비율이 높고 전국 최초의 특색있는 조례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활동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부문에서는 조호권 의원(민주·북구 5)이 발의한 '광주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권일기자 cki@

"與, 고개숙인 남자되면 대통령 성공 못해"

박지원 '안상수, 이대통령에 사과' 비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여당이 대통령 앞에 가면 자꾸 작아지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서는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여당과 야당 국회를 존중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초등학생이 잘못하고 담임 선생한테 용서비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당내 지역 갈등과 관련, "우리는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둬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반 잔여석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i.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하(전)풍관원, 초대농풍사협회장, 손송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송운 교수팀 직강
전남농업전문학원 ☎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IBT 방식 평가는 화상칠판방식인
압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리딩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이 1:1 독해 . 문법 강의를 한다
결론은 多讀,多聽,多習이다
선생님이 회화가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수있다!
●초.중.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교수님.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어민 1:1
압구정영어회화 · 리딩
ah-english.com | 070-7433-0594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010-4608-6061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발 맛사지 후 사용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상담문의 ☎ 010-3231-3665